

## “캄캄합니다”

### ‘르포’ - 타르 덮쳐 생계 잃은 영광군 양식장 어민들

#### 한나라, 완전 보상 ‘특별법’ 제출

“저축해 둔 돈은 털어지고, 당장 먹고 살 일도 갑갑하요, 담배 살 돈도 없는 데 무슨 설이요. 나가면 돈이니 며칠째 구들장 신세만 지고 있소.”

〈관련기사 3면〉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어민 김광태(57)씨는 20일 오후 마을회관에서 열린 타르 피해 생계대책회의 중 긴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영광·신안·무안 등 전남 서남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생계가 막막해진 피해 어민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타르덩어리가 전남

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영광군 염산면 아월리 마을회관에 모여든 어민들의 얼굴도 근심으로 가득했다.

어민들 중 김 양식업을 하는 어가는 5천만원 정도의 용자를 받아 양식을 한 뒤 수확을 통해 이를 되갚는데, 보상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계가 막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양식 어민 홍순영(57)씨는 “자식들이 대학생인데, 당장 학비가 없어 걱정이야. 죽지 못해 사는 데, 설이라도 될 수 있게 긴급 생계비라도 하루빨리 지원해 줘요”고 말했다.

이날 현재 서남해안 타르 피해 어가 수는 영광 3천100세대, 신안 3천650세대, 무안 1천566세대 등

## 설 다가오는데 당장 먹고 살 일 ‘막막’ 생계비 커녕 방제작업 일당도 못받아

서해안에 얼습한 이후 20여일이 지났지만 정부의 긴급 생계비 지원 소식은 아직 감감하다.

김씨는 영광 칠산 앞바다에서 숭어잡이로 한 달 평균 3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어업을 중단한 채 타르 덩어리 제거작업에 나서고 있는 아작까지 생계비는 커녕 방제작업 일당(5만~6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생계지원금이 곧 나온다고 말을 하던데 언제 나올지 답답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마을 37세대 중 30세대는 여선을 타고 고기를 잡거나 갯벌에서 맨손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인 갯벌과 바닷가가 타르 덩어리로 뒤덮이면서 생계의 수단을 잃어버렸다.

이 마을 생계대책부위원장 박성복(57)씨는 “갯벌에서 맨손으로도 하루 평균 5만~6만원의 수입을 올렸었다”며 “지금은 전기요금도 물론, 자녀 학비도 내지 못해 걱정하는 주민들이 한 두명이 아

모두 1만800세대에 육박했다.

전남도는 지난 14일 영광 등 3개 군 피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긴급생계비 300억원과 방제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이 주민에게 바로 전달될지는 미지수다. 충남 태안처럼 지자체간 피해지역 배분 비율을 놓고 설전이 오갈 가능성이 큰 데다 구체적인 자금 안배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원금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피해 어민들에게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별 자금 안배 기준 등을 세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21일 태안 기름유출 피해와 관련, 피해 주민들에 대한 완전보상 등을 골자로 한 ‘태안지역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참담’ 21일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창우마을 선착장에서 어민 김광태(70)씨가 숭어 그물에 타르 덩어리가 달라붙은 모습을 보고 울먹이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 공무원들 엉뚱한 전봇대 2개 뽑아놓고 ‘호들갑’

##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 기반시설 정비해달라”

### 대불산단 업체 불멘소리

“전봇대 뽑는 소동은 또 다른 탁상행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의 지적이 후 대불산단단지(대불산단)내 ‘전봇대’ 두개가 사흘만에 뽑혔으나 입주 업체들은 ‘발 빠른 행정’을 반기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문제의 전봇대가 당선인이 지적했던 그 전봇대가 아니었을 뿐더러, 전봇대 몇개 없앤다고 공단 인프라가 개선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불산단에는 가로등·가로수 정비, 붕괴 위험이 있는 교량 보강, 비현실적인 도로교통 법규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

나 당국에서는 전봇대 두 개를 옮긴 것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듯 생색을 내는 분위기가 한심한 것이다.

지난 2006년 9월 이명박 당선인에게 전선 지중화를 처음 건의한 유인숙(주)유일 대표는 21일 “이 당선인에게 건의한 것은 전반적인 기반시설을 정비해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전봇대 2개 옮겨놓고 모 든 것이 해결된 듯 호들갑을 떠는 정부 관계자와 언론을 보니 가슴이 더욱 답답해 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유 대표는 “당시 이 당선인에게 전선 지중화와 가로수, 가로등 이 설, 교량 하중 보강, 도로 확장 등

을 건의했고, 전봇대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요청한 것”이라면서 “이 당선인이 전봇대를 하나의 사례로 든 것 뿐인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전봇대에만 매달리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블록운동 업체 ‘대명특수’의 문승호 사장은 “이번에 뽑은 전봇대는 양복 8차로와 6차로가 만나는 휴스틸 사거리의 모퉁이에 있는 것인데 블록 운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전봇대”라면서 “6차로 도로변에 있는 전봇대와 전선을 인도 밖으로 빼줘야 해결될 문제를 불필요한 전봇대만 뽑아놓고 다 된 듯 하는 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불산단에서 선박용 블록을 제작하는 김은수 삼육종합강건 대표는 “이번에 현장에서 만난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을 보니 업체의 어려움보다는 이 당선인이 지적한 전봇대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더라”고 꼬집었다.

/영광=박진표기자 lucky@

## “호남운하 ‘국비 + 민자’ 추진을”

### 박준영 전남지사 신년 기자회견



박준영 지사

박준영 전남지사는 21일 영산강 운하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과 맞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의 영산강 운하 사업 추진이 도가 그동안 진행해 온 영산강 주변 문화·관광 사업들이 대거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영산강 뱃길 복원이나 수질·환경 문제, 유입되는 오폐수 처리문제, 영산강 댐 문제 등은 용역이 진행중이거나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영산강변 도로 개설 등은 이미 정부의 타당성 조사가 끝나 설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과 맞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의 영산강 운하 사업 추진이 도가 그동안 진행해 온 영산강 주변 문화·관광 사업들이 대거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영산강 뱃길 복원이나 수질·환경 문제, 유입되는 오폐수 처리문제, 영산강 댐 문제 등은 용역이 진행중이거나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영산강변 도로 개설 등은 이미 정부의 타당성 조사가 끝나 설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또 “2010년으로 예정된 F1(포틀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는 특별법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문제는 경주장 공사 기간인데 현재 관심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고 사업 주체인 KAVO의 지분 문제도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므로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설 이전에 통합하자”

### 민주당 박상천 대표, 신당에 제의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2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달 설 이전까지 민주신당과의 당 대 통합을 공식 제안한다.

〈관련기사 5면〉

민주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할 경우, 총선 전 범여권의 단일 대오 형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22일 회견에서 박 대

표는 야권통합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라며 “18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통합을 통한 강력한 대

안야당, 중도개혁주의 정당 건설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제안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민주당의 전격적인 통합 제안은 민주신당 중진그룹과의 물밑 접촉이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후문이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민주신당 대변인은 “박상천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제안 내용을 살펴본 뒤 지도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